

육아정책 소식

유보통합,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본격 개시

교육부는 4월 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에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하여 위촉위원을 구성하였다.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이후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였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25명(위촉위원 19명, 정부위원 5명)
 - 위촉위원은
 - ▲ 학부모(장애영유아학부모 등 포함) 3명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 정부위원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5명
- 그 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를 특별위원(1명)으로 참여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 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원칙	운영 분야	대상	적용범위	선정규모
① 국민안심	■ 급식비 격차 완화	어린이집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 교육청
	■ 유아학비 경감	유치원		
	■ 방과후 과정비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내 3그룹 이상	4~5개 교육청
	■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내 20개 기관 이상	2개 교육청
	■ 안전환경 조성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② 다양 ③ 자율 ④ 지역중심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하여 사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18회 입양의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목)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입양가족,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인 아침고요 등지복지회를 포함하여, 입양문화 개선과 입양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14개(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9명)를 수여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내편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대기 약 8,700명 적극 해소 추진

교육부는 5월 17일(수),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4월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약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5개 시도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오는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도 계속 확대한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하여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개입지원을 위한 전문가 이어가기 포럼 개최

초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며 아동수가 급감하는 때일수록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개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장애위험 조기발견·개입지원과 인식개선'을 주제로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텔레이)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이어가기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개입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영유아의 발달지연이 우려된다는 보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최되는 1차 포럼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의 및 현황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제도 비교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과제로 한국아동학회 및 한국육아지원학회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이어가기 포럼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앞으로 5차례 더 개최되며, 장애위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17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5일(목) 오후 2시, 중소기업 디엠시(DMC)타워 DMC홀에서 「제17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5월 25일은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7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번 행사는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에 이바지한 유공자, 실종아동 가족 및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실종아동 예방 홍보와 찾기 활동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최희승(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경찰청장 감사장을 5명에게 수여하였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경찰청 김준철 국장은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실종아동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권리 보장원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예방과 실종아동의 가정 복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으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현장에 특화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보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였다.

핸드북은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명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교사, 원장,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되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발간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7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실태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으나,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금번에는 없다.

양육·돌봄 등 분야별 한부모가족 서비스 모바일로 직접 안내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하여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에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정책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직접 책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 안내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었던 한부모가족이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 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어린이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4월 12일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기금 수익률 제고와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재무·금융 컨설팅을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중소퇴직기금제도(푸른씨앗)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 개 사업장에서 만 육천여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601억 원, 연 환산 수익률은 3.05%를 기록하며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총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안에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100% 면제해 주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문턱을 한층 낮추고 있다. 푸른씨앗에 적립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급여는 전담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는 5월 25일(목) 오전 10시,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쟁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두고 가사·돌봄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및 희망하는 국민이 함께하였다.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신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 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숙명여대 강정향 객원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관리상 쟁점과 관련하여 도입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우리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자 한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발대식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